

#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협력 무대 막 올랐다

여수서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개막  
에너지 전환 정책·EU 탄소중립 등 공유  
25일까지 포럼·세미나 등 녹색성장 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장인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이 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전남도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막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 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날 개막식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사무총장, 각국 정부 대표, 산업계,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800여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녹색대전환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이제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경제와 산업, 생활 전반을 바꾸는 녹색대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남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여수 국가산단은 재생에너지와 수소 중심의 탈탄소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고, 블루카본 확대와 산림 조성 등 탄소흡수 기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통해 전남도의 비전과 세계의 경험이 만나 기후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선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과 함께 일본의 산업 전환 전략,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정책 등을 소개하고 주요 국가 간 정책 경험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 기업, 청년, 미래 세대 대표가 함께 무대에 올라 '모두가 함께 만든

미래'를 주제로 한 공동 행동 선언도 이뤄졌다. 이는 녹색대전환이 특정 주체의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의 미래 전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각종 포럼, 산업 세미나,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협력의 장으로 운영된다.

행사 기간 전남도가 주최하는 '기후환경에너지대전'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후보호주간' 부스가 함께 운영된다.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감 기술 등 기후-에너지 분야 최신 기술과 함께 시민사회의 기후행동 실천사례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하고 글로벌 기후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 대규모 기후 국제행사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 팡파르

광주시·전남도, 내일까지 공동 주최  
여수세계박람회장 131개 부스 운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KEET)'이 20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했다.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기후-에너지 산업 전시회다. 22일까지 3일간 이어진다.

전시회에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열), 수질·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환경친화기술, 자원순환, ESG, ESS, 분산에너지, 이차전지, 스마트그리

드 등 71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총 131개 부스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GGHK)와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상담회에서는 29개 국가 58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기업과 1대1 상담을 진행하며 수출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특히 이날 현장에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해 한국전력공사, 전남 에너지공공단, 광주 에너지공공단, (주)원광에스엔티, (주)세방리튬배터리, (주)인셀 등 주요 기관과 기업 전시관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기후-에너지 산업의 기술 현황과 전환 흐름을 점검했다.

/양시원기자

## 강기정·신정훈 "통합 비용 특교세 지원해야"

姜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선 안돼"  
辛 "통합준비 늦어지면 혼란 불가피"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국회의원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의 정부 추경 미반영과 관련,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전산 통합 180억원을 포함한 최소 행정비용 573억원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다"며 "삭감된 통합특별시 출범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제경제 악화와 경제위기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최초 통합특별시 출범이 예산 부족으로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며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전산 통합과 행정 준비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란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통합 준비까지 늦춰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기대가 아니라 혼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7월 출범은 정해졌고 이는 약속"이라며 "지금이라도 특별교부세 등 가능한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 최소한의 준비는 반드시 갖춰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행정통합의 성패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이 과정을 쟁기겠다"고 덧붙였다. /변은진기자

## 진보 이종욱 통합특별시장 후보 '5대 전략' 발표

광주·전남·북 호남대통합 600만 도시  
20조 시민배당·신생아 1억 미래펀드

이종욱(사진)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0일 호남의 생존과 미래 번영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호남의 미래 전략으로 ▲600만 호남 메가시티 구축 ▲20조 시민배당·투자위원회 설치 ▲RE100



반도체·디지털 AI 산업 육성 ▲신생아 1억원 미래펀드 ▲호남 1시간 생활권 교통망 조성 등 5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남광주에 전북을 더해 호남 대통합으로 600만 호남특별시를 건설하고 인구 유입을 실현하겠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인센

티브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민공동정부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남광주를 디지털 AI의 세계적 메카로 만들겠다"며 "RE100 기반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을 유지하고 10조원 규모의 중소벤처 창업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 이 후보는 "신생아 1억원 미래펀드로 든든하고 공정하게 출발할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출생 시 적립해 18년 간 투자, 최소 1억원을 청년 도전 자금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기자

www.kps.co.kr

#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